

# 신문시장의 다양성과 주요 신문들의 보도 성향에 대한 비교 고찰

최현주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1. 서론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 체제로 변화되면서, 신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신문 창간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다. 이로써 신문시장은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념적 차별화가 없던 한국의 신문시장에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신문이 등장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벌그룹의 산하에 있던 경향신문이 1998년 완전사원주주회사로 탈바꿈하면서 보도 성향이 진보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보수 일변도의 신문시장에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자리를 잡으며 신문시장의 다양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신문시장은 편파적인 보도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신문의 신뢰성과 함께 독자를 잃으며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신문이 보수든 진보든 나름대로의 이념성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념성을 달리하는 신문들이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사회에 유통시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로 나뉜 신문들이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이재경, 2004). 즉,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 보수 신문이 제시하는 보도 내용과 진보 신문이 제시하는 보도 내용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조차 어렵게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제공이라는 신문의 내적 다양성(internal diversity), 즉 각 신문이 자신의 기사에서 다양하고 대조적인 관점들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신문의 이념성 논의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신문들의 보도 성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들은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비교적 뚜렷한 이념적 정체성을 보여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문의 외적 다양성(external diversity), 즉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는 미디어와 반대하는 미디어가 균

형적으로 분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었지만, 정치적 대립이 강한 갈등적 이슈에 대한 분석 위주로 진행되어, 우리나라 신문의 이념적 성향을 정치적 차원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의 이념성을 정치적 차원에만 국한해서 진단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차원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 소위 보수 또는 진보라고 규정한 신문이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이슈에도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나라의 신문의 다양한 차원의 이슈에 대한 보도가 실제로 기존 연구가 말하는 대로 진보와 보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우산 아래 포괄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정치적 이념이라는 단일한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이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치학의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선정하고 그 이슈에 대해 각 신문이 어떠한 보도 성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슈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라고 불리는 각 신문이 이슈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달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이 사회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지를 고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는 신문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념 성향의 다양한 차원에 해당하는 이슈별로 각 신문의 외적 다양성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살펴봄과, 이와 더불어 한 이슈 내에서 신문이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진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사의 종류(스트레이트 기사, 의견기사)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의 의견기사는 신문사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공간으로, 의견기사에서의 논조를 통해 신문마다 나름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을 모토로 해야 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신문사의 성향과 상관없이 이슈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공평하게 제시해 주어야 신문의 내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기사와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상반된 입장의 기사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반된 입장의 취재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신문의 내적 다양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연구 고찰

### 1) ‘보수-진보’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인 성향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게 된다. 보수와 진보라는 구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개념적 구분 방식들 중의 하나지만, 이러한 개념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대척점에 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진보’라는 개념은 역사의 발전과 개선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에 대한 요구는 인간 일반의 공통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라는 개념은 특정 세력의 이념적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회 세력이 공유하는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의 반대 개념은 ‘진보’가 아니라 ‘혁신’이며, ‘진보’의 반대 개념은 ‘보수’가 아니라 ‘정체’ 또는 ‘퇴보’라는 것이다(강정인, 1993; 김원식, 2002). 이러한 논의에 전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라는 용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어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진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수’는 전통가치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여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진보’는 전통과 기존의 질서를 혁신하며 역사의 단절도 불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원식, 2002; 안병영, 2003; 정영태, 2002). 하지만 이념적인 성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보수-진보라는 개념이 단 하나의 속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보수’ 또는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며, 그 의미 또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연구의 대가 로시터(Rossiter)는 보수주의의 유형을 2가지로 나눈 바 있다. 보수주의를 인간 내면에 내재하는 기질적 성향과 인간을 둘러싼 외적 상황에 대한 태도로서 구분한 것이다. 즉, “기질적(temperamental) 보수주의”는 “생활과 노동의 관습적 패턴에 대한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상황적(situational) 보수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의 각 질서에 대한 변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Rossiter, 1980, 홍윤기, 2002, p.23에서 재인용).

다양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가졌던 사회심리학자들은(Eysenck, 1944; Ferguson, 1939; Thurstone, 1934)<sup>1)</sup>은

---

1) Thurstone(1934)은 효시적인 연구에서 십여 개의 대상, 즉 전쟁, 교회, 신, 진화론, 지능, 공산주의, 산아제한, 이혼, 금주법, 주일 엄수 등에 대하여 자신이 제안한 등간격법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요인분석(factor-analysis)하여 보수-급진이라는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발견은 일반적인 태도가 존재함을 시사한 중요한 것이지만 수많은 대상 중에서 십여 개만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태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 보다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킨 연구들(Comrey & Newmeyer, 1965; Eysenck, 1944, 1947; Kerlinger, 1972; Wilson & Patterson, 1968)에서도 진보-보수의 요인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최석만 외, 1990 그대로). 따라서 이후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태도의 특성파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다양한 사회적 대상을 포괄하는 일반적 태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sup>2)</sup>(최석만 외, 1990). 초기에는 보수-진보를 포괄적인 단일요인으로 간주하였으나,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수-진보라는 태도를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리라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Eysenck(1975)는 요인분석을 통해 보수주의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사유재산, 부의 분배 등)과 사회적인 측면(성의 해방, 인종차별 등)으로 구분하였고, Lipset(1960)은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으로, Kerr(1946, 1952)는 정치, 경제, 종교, 미학, 사회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Ray(1973)는 정치, 사회, 경제, 도덕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최석만 외, 199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보수-진보라는 개념은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보수-진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차원들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겠지만, 보수-진보라는 이념 성향을 단일한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 이념의 의미를 보다 세분화한 강원택(2005)의 네 가지 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우(left-right)의 차원이다. 좌파(좌익)-우파(우익)의 개념은 프랑스혁명(1789-1799) 당시 제1기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비특권계급인 제3신분<sup>3)</sup>을 대표하는 공화파가 앉았던 것에 비해 오른쪽에 왕당파가 주로 앉았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에서도 왼쪽에 급진파인 자코뱅당(Jacobins)이, 오른쪽에 온건파인 지롱드당(Girondins)이 앉으면서 좌파와 우파는 각각 급진적 변혁과 보수적 안정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의 좌우 차원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계급 정치적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경제적/물질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차원이다(Kitschelt, 1994). 권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시점에서의 권력자나 체제적으로 유력한 인물이나 사상으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나타낸다. 따라서 권위는 법과 질서, 그리고 전통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로 불리는 진보는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여 동성애 등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영화나 창작물에 대한 검열이나 규제에 반대한다. 셋째,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 차원이다. 여기서 보수는 근대적 가치를 대표하며, 진보는 탈근대적 가치를 옹호한다. 이념의 이러한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잉글하트(Inglehart, 1977)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경제적 풍요와 평화의 시기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과거

2) 각기 사용한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수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개념(진보, 급진, 자유주의 등)을 사용하였다.

3) 프랑스 혁명 이전의 평민층, 즉 시민계층을 말한다. 14세기 초 3부회가 소집된 이후 국민대표는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 제3부 시민 등 신분별로 구성된 데에서 제3신분이라는 말이 생겼다. 제3신분은 사제, 귀족의 특권신분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백성으로 간주되었다. 프랑스혁명이 성공하자 제3신분은 곧 해체되었다.

와 같은 물질적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 계급 균열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탈물질적, 탈근대적 가치는 환경, 인종, 동물보호, 반핵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새로운 균열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사회적 논란은 바로 이와 같은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vs. 거부의 차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특성인데 반하여, 이 차원은 한국 사회의 분단 상황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야기된 이념 성향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와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는 그것이 폐기되거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진보에 대한 강원택(2005)의 이러한 네 가지 차원 구분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다양한 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좌-우 차원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이미 좌파/우파 담론이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보수/진보 담론으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정재철, 2002), 보수-진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명명하기에 혼란스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원을 앞서 설명한 강원택(2005)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가치의 배분, 둘째, 종교, 윤리, 전통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문제(기존 질서나 사회적 가치를 유지, 보존하느냐 아니면 기존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수용이냐), 그리고 셋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는 정치이념의 문제 등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 신문의 이념성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한국 신문의 이념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신문의 보도 성향을 분석한 결과, 신문은 그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한국 신문이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따라 같은 사건을 얼마나 다르게 구성하는 지를 보여준 연구들은 상당히 있다.

김정아·채백(2008)은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신문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난 2006년 비슷한 시기에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인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사건과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두 신문의 정치적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신문이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따라 같은 사건을 얼마나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신문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이민규·김수정(2006)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의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조선일보는 호

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전통 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인 반면, 한겨레신문은 호주제를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프레임을 주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또한 정재철(2004)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를 대상으로 배아복제실험과 같은 유전자 연구에 대한 프레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신문 모두 유전공학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아복제 실험과 같은 유전자 연구의 윤리적, 경제적 이슈가 담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사가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정재철(2001)은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에 관련된 기사를 담론 분석한 결과, 언론개혁 관련 스트레이트 뉴스 담론의 경우 신문들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의 표현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함으로써 담론 생산 양식이 상당 부분 왜곡된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신문사마다 지향하는 방향, 가치판단,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원의 선택이나 기사제목 등의 활용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과장, 축소 및 배제되는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기사의 편파성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이한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환경문제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김영기(2003)는 ‘동강댐 건설’ 이슈에 대해, 그리고 원만해.채백(2007)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이슈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신문 보도의 담론을 비교한 김영기(2003)는 한겨레신문은 환경운동가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결정을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한 굴복으로 해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한겨레신문은 환경운동론자와 농민으로 구성된 독자층의 기대에 호응한 반면, 조선일보의 시장주의자 혹은 개발주의론자의 기대에 호응한 결과라고 보았다.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이슈를 분석한 원만해.채백(2007)은 두 신문의 정치적 지향성의 차이가 정보원의 차이를 불러오면서 환경프레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환경갈등에서도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입장차이가 드러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보수-진보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현실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갈등적 요소가 강한 이슈에 치중하여 주로 보수와 진보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현실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량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이념성 지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이건호.고홍석(2009)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보도에 대한 국내 5대 일간지의 보도 시각의 차이를 1면 기사들의 취재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보도시각은 조선·중앙·동아와 한겨레·경향신문으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반대의 시각이 컸던 신문은 통념상 진보의 대변자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이 아니라 경향신문이었으며, 이와 다른 모습을 선도한

신문은 보수의 대표로 여겨지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황치성(2008) 또한 국내 6개 일간지와 방송 3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 보도행태를 케이스스터디로 분석하여 이들의 보도성향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대 한겨레, 경향신문의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 나누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갈등적 이슈에 대한 보도행태가 갈등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불신의 누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박재영(2009)은 2009년 입법 사안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언론의 정파성이 보장되는 의견 기사를 제외하고 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신문들의 보도 정파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문들의 보수와 진보 지형에 따라 보도 입장이 나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보수지의 극단이 조선일보가 아닌 중앙일보라고 밝혔다. 이진영(2008)은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계기로 통념상 보수로 일컬어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이념성과 한겨레신문의 이념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북한을 주제로 다룬 사설을 분석하였다. 비록 한겨레신문이 일반적으로 진보적 관점을, 또 비교 대상 신문들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보수 진영의 신문들은 이슈별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립적 위치에 가깝게 서거나,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자신들의 이념성을 달리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신문의 이념적 지형을 밝히고자 했던 이러한 연구들은 진보-보수의 다양한 차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주로 연구 당시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하나의 이슈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차원적인 보수-진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현재 한국 신문의 보수-진보 대립구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세밀한 구분 없이 정치적 대립구도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문의 보수-진보 성향에 대하여 각 연구마다 단일 차원에서 하나의 이슈만 분석해오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신문의 외적 다양성의 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을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수-진보의 차원을 1)경제적 가치의 배분, 2) 종교, 윤리, 전통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문제, 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는 정치이념의 문제 등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이슈로 1) 종합부동산세 폐지, 2) 호주제 폐지, 3) 대북지원을 선정하고 이를 국내 6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 1: 세 가지 차원의 이슈에 대해 신문들의 보수-진보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6개 신문사는 세 가지 차원의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1: 6개 신문사는 세 가지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스트레이트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2: 6개 신문사는 세 가지 이슈를 다루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상반된 입장의 취재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 2) 연구방법

##### (1) 이슈의 선정 및 분석 기간

분석 이슈<sup>4)</sup>로는 ‘경제적 가치의 배분’ 차원에 속하는 이슈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종교, 윤리, 전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 차원에 속하는 이슈로 ‘호주제 폐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는 ‘정치이념’ 차원에 속하는 이슈로 ‘대북지원’을 선정하였다.

기사의 수집 기간은 각 이슈별로 달리 선정하였다. ‘대북지원’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2009년 4월 5일)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행(2009년 5월 25일)이라는 핫 이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대북지원 보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을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1년 10개월)로 하였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지만 호주제 폐지안이 법사위를 통과(2005년 3월 1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위헌 심판을 선고(2005년 2월 3일)한 2005년을 전후하여 살펴보아야 다양한 논의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을 분석하였다.

4) 외교폐지론(2009.10.19), 혼인빙자간음죄 폐지(2009.11.27), 세종시, 노동법, 미디어법, 4대강사업, 용산참사, 삼성 이진희 회장 사면, 동성애, 이혼, 낙태 등



## (2) 분석대상 신문과 기사수집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 신문으로 국내 종합일간지 6개 신문을 선정하였다. 한국 주류 신문들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신문과 중도적인 신문으로 알려진 신문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선별된 분석대상 신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 포함되었다.

기사 수집은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www.kinds.or.kr](http://www.kinds.or.kr))에서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카인즈 뉴스 검색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선일보([www.choson.com](http://www.choson.com))와 중앙일보([www.joins.com](http://www.joins.com))는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대북지원’의 경우, 북한 핵과 관련한 대북지원 문제가 본 연구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대북지원 북한 핵’이라는 주제어로 대북지원과 북한 핵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사를 검색하였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호주제 폐지’의 경우 ‘호주제’를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뉴스의 종류는 관련 이슈에 대한 사실기사와 의견기사 모두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트레이트뉴스, 사실, 내부 칼럼, 외부 칼럼, 기획/심층기사, 인터뷰 및 대담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사의 검색범위는 ‘제목+본문’으로 하여 관련 기사를 최대한 추출한 다음, 각 이슈와 관련하여 검색된 기사 중에서 분석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코딩은 미리 코딩 지침서를 만들고 코더들을 충분히 교육한 후 실시하였다. 신문방송학 전공 세 명의 대학원생 코더가 코딩을 하였다. 각 이슈별로 한 명의 코더가 하나의 이슈를 담당하여 연구자와 토의를 거친 후 코딩을 하였다. 각 이슈에 대해 코더가 본격적으로 코딩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례가 되는 기사 50건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코더와 연구자가 동시에 코딩을 실시하여 상호 비교를 하였다. 이는 일종의 코더 간 신뢰도 측정으로 코더가 연구자와 코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세 이슈에 대해 각각의 코더와 연구자의 일치도는 분석 유목별로 90%에서 100% 정도도 대체로 일치했다. 한편, 코더 내에서의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코더는 자신의 이슈에 대해 코딩을 마친 다음 전체 기사 중에서 첫 20% 분량 기사는 다시 코딩하도록 하였다.

## (3) 분석유목 선정

각각의 이슈에 대하여 기사제목의 입장, 기사본문의 입장, 취재원 균형지수 산출을 위한 취재원 사용 유형(취재원 등장여부, 취재원 입장, 취재원 정보 유형, 취재원 인용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 가. 기사 제목의 입장 표현

각 이슈에 대하여 제목의 입장 표현은 특정한 입장의 부각 없이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단순 정보 전달’과 입장 표현이 있는 ‘입장 표명’으로 나누고, 입장 표명의 경우 다시 이슈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나누어 코딩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지지’ 입장은 기사 제목에 ‘징벌적 조세’ ‘강남 왕따시키려 만든 법’ ‘세금폭탄’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 부각된 경우이며, 반대 입장은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종부세 무력화’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인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용어가 부각된 경우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지지’ 입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 부각된 경우이며, 반대 입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용어가 부각된 경우다.

‘대북지원 북한 핵’의 경우, 단순히 지지와 반대로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사용하였다. 즉, ‘단순 정보 전달’과 더불어 ‘핵 포기하면 대북지원’ ‘핵 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 ‘대북지원 중단/불가’로 나누어 코딩했다.

#### 나. 기사 본문의 입장 표현

본문의 입장은 기사 전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반적인 논조에 기초하여 각 이슈에 대한 입장을 코딩했다. 입장을 ‘단순 정보 전달’ ‘지지’ ‘반대’로 구분한 기준은 제목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단, 특정 입장을 나타내는 문구가 한두 번 포함됐다고 해서 그 입장으로 코딩하지는 않았으며, 기사를 읽은 후의 대체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코딩했다.

#### 다. 취재원 균형지수

각 기사의 취재원에 대하여 누구를 취재원으로 사용했는가를 각각 코딩하고, 그 취재원의 입장을 ‘지지’ ‘반대’ ‘무입장’으로 나누어 코딩했다. 동일 취재원이 반복 인용될 경우는 1개로 코딩했다. 취재원의 입장은 기사에 직간접적으로 기술된 취재원의 의견의 톤을 기준으로 코딩했다. 이를 가지고, 반대 입장의 취재원수에서 지지 입장의 취재원 수를 빼어 이를 전체 취재원 수로 나눈 값을 취재원 균형지수로 삼았다. 따라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지지와 반대 입장의 취재원을 균형 있게 사용한 것이고, 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취재원의 불균형은 심화되는 것이다.

$$\frac{(\text{반대 입장의 취재원 수}) - (\text{지지 입장의 취재원수})}{\text{전체 취재원수}}$$

전체 취재원수

#### 4. 신문의 다양성에 대한 현황 분석

##### 1) 이슈별 신문들의 보수-진보 스펙트럼

###### (1) 대북지원 북한 핵

‘대북지원 북한 핵’에 대한 국내 6대 일간지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는 조선 25건, 중앙 28건, 동아 29건, 한겨레 34건, 경향 26건, 한국일보 27건으로 신문사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설 및 칼럼과 같은 의견 기사의 수는 중앙일보(20건)와 동아일보(16건)가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향신문(4건)과 한국일보(3건)의 경우 상당히 제한된 수의 의견기사만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과 <표 2> 참조).

‘대북지원 북한 핵’의 경우,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는 입장과 본문에서 드러나는 입장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신문에서 기사 제목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입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문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고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본문 내용에 나타난 입장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이트 기사만을 대상으로 신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신문들의 주된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 포기 후 지원’은 항상 주장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처음 제안하고 10월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이는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핵 폐기와 지원을 선후(先後)의 문제에서 동시적 교환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대북지원의 문제를 핵문제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핵포기하면 대북지원’의 입장으로 함께 묶어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 방향이 ‘선 핵폐기 후 지원’이라는 점과 더불어, 스트레이트 기사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기간 중 발표된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정책은 ‘핵포기하면 대북지원’한다는 입장의 기사 비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아일보>가 ‘핵을 포기하면 대북지원’을 하는 것보다 ‘대북지원 중단/불가’(34.5%)를 해야 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입장을 드러낸 반면, 한겨레신문은 ‘핵 포기’와 별개로 ‘대북지원’(38.2%)하는 입장을 높은 비율로 나타냈다.

<표 1> 신문별 '대북지원 북한 핵'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 제목 및 본문 입장

신문/ 입장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단순정보전달		핵포기별개로 대북지원***		핵포기하면 대북지원		대북지원 중단/불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11	8	3	3	8	10	3	4	25
	44.0%	32.0%	12.0%	12.0%	32.0%	40.0%	12.0%	16.0%	100.0%
중앙	14	6	2	3	6	15	6	4	28
	50.0%	21.4%	7.1%	10.7%	21.4%	53.6%	21.4%	14.3%	100.0%
동아	16	8	3	4	4	7	6	10	29
	55.2%	27.6%	10.3%	13.8%	13.8%	24.1%	15.2%	34.5%	100.0%
한겨레	18	14	9	13	4	4	3	3	34
	52.9%	41.2%	26.5%	38.2%	11.8%	11.8%	8.8%	8.8%	100.0%
경향	17	10	4	5	3	8	2	3	26
	65.4%	38.5%	15.4%	19.2%	11.5%	30.8%	7.7%	11.5%	100.0%
한국	7	4	5	5	7	15	8	3	27
	25.9%	14.8%	18.5%	18.5%	25.9%	55.6%	29.6%	11.1%	100.0%

\* 제목 카이스퀘어 검증:  $\chi^2=17.391$ ,  $df=15$ ,  $p=.296$

\*\* 본문 카이스퀘어 검증:  $\chi^2=41.397$ ,  $df=15$ ,  $p<.001$

\*\*\* 대북중단을 비판한 기사도 '핵포기 별개로 대북지원'에 함께 묶음.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北 핵실험 과장/ 보수단체 "대북지원 전면 중단을"'(동아일보, 2009.5.27), '北 "포괄적 패키지 거부" 美 "단호히 제재"'(한국일보, 2009.7.24), '미국, "북한에 추가 식량 지원 안한다"'(한국일보, 2009.7.3), '정부, "쌀, 북한 지원 검토 안해"'(중앙일보, 2009.10.19)와 같이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특정 입장을 제목에 내세우며 각 신문의 입장을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北核 폐기까진 '채찍'뿐... '당근'은 없다'(조선일보, 2009.9.18), 'DJ·盧가 지원한 69억달러(10년간 현금 29억달러, 현물 40억달러), 北 핵개발자금 2배 넘어'(조선일보, 2009.7.7) 등의 기사처럼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거나 대북지원보다는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겨레신문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핵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을 하자는 입장의 기사들로는 '남북경색에 애꿎은 북 아이들만 굶을판'(한겨레신문, 2009.12.11), '김덕룡 민화협 대표-"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강화"'(한겨레신문, 2009.10.29),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 오는데/정부는 대북압박·제재 고수'(한겨레신문, 2009.9.23)라는 기사에서는 "56개 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이날 정부의 대북 지원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대북지원을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가는 길 또 다른 '벽' 쌓나'(한겨레신문, 2009.10.8)에서는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

을 걸고, 관광 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상업적 거래인데, 핵개발 전용을 막는다는 정치적 논리로 거래 방식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제관례와 상식에 어긋난다”는 한 대북 경험 전문가의 말을 빌어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대북지원에 가장 반대하는 신문에서 가장 찬성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자면, 동아-조선-중앙-경향/한국-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북지원 북한 핵’과 관련된 **의견기사**들의 입장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북지원 중단/불가’에 대하여 높은 비율로 의견을 개진한 신문은 동아일보(37.5%)와 조선일보(33.3%)로 나타났으며, 핵포기와 별개로 대북지원을 하자는 입장은 한겨레신문(90.0%)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핵을 포기하면 대북지원을 하자’는 입장은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분석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2> 신문별 ‘대북지원 북한 핵’ 관련 **의견 기사** 제목 및 본문 입장

신문/ 입장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단순정보전달		핵포기별개로 대북지원***		핵포기하면 대북지원		대북지원 중단/불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2	1			4	5	3	3	9
	22.2%	11.1%			44.4%	<b>55.6%</b>	33.3%	<b>33.3%</b>	100.0%
중앙	16	3	2	5		9	2	3	20
	80.0%	15.0%	10.0%	<b>25.0%</b>		<b>45.0%</b>	10.0%	<b>15.0%</b>	100.0%
동아	13	1			3	9		6	16
	81.3%	6.3%			18.8%	<b>56.3%</b>		<b>37.5%</b>	100.0%
한겨레	7		2	9			1	1	10
	70.0%		20.0%	<b>90.0%</b>			10.0%	10.0%	100.0%
경향	2		1	2	1	2			4
	50.0%		25.0%	<b>50.0%</b>	25.0%	<b>50.0%</b>			100.0%
한국	3			2		1			3
	100.0%			<b>66.7%</b>		33.3%			100.0%

\* 제목 카이스퀘어 검증:  $\chi^2=29.207$ ,  $df=15$ ,  $p<.05$

\*\* 본문 카이스퀘어 검증:  $\chi^2=35.632$ ,  $df=15$ ,  $p<.005$

\*\*\* 대북중단을 비판한 기사도 ‘핵포기 별개로 대북지원’에 함께 묶음.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상반된 축에 놓여 있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의견기사에 나타난 주장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은 비율로 낸 동아일보의 경우, ‘북한 길 잘못 들인 중국’(동아일보, 2009.10.17)에서 “지금 북한에 쌀을 보내면 군량미 창고로 갈 게 뻔하다.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북한의 버릇을 고칠 생각이 있다면 시와 때를 가려야 한다....(중략)...북한의 도발을 남한의 지원으로 보상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북지원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핵실험을 MB 탓’이라며 김정일 돕는 민주당’(동아일보, 2009.5.27)이라는 사설에서는 “1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1년간의 식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3억~5억 달러가 드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DJ,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퍼준 8조 원 이상의 돈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는 데 들어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이 지난달 성능과 사거리가 한층 개량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재차 발사한 것이나, 1차 때보다 폭발력이 25배나 커진 2차 핵실험을 그제 강행한 것도 지난 정권들의 해픈 대북 지원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며 대북지원금이 북 핵개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대북지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의 경우, 우선 금강산·개성 관광과 인도적 지원 등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 통로를 상설화하여, 핵 협상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관계와 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사설:‘첫걸음 펜 핵 협상,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한겨레신문, 2009.12.11). 또 다른 칼럼에서는 “거의 모든 대북 협력사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한국의 ’네오콘‘’, 한겨레신문, 2009.12.22).

이처럼 보수와 진보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두 신문은 주장의 근거를 달리하여 대북지원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칼럼의 수도 다른 신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견 기사에서 대북지원에 가장 반대하는 신문에서 가장 찬성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동아-조선-중앙-경향-한국-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 (2)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국내 6대 일간지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는 조선 49건, 중앙 48건, 동아 66건, 한겨레 83건, 경향 115건, 한국일보 64건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설 및 칼럼과 같은 의견기사의 수는 한겨레신문(20건)과 경향신문(17건)이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앙일보(3건)와 조선일보(6건)의 경우 상당히 제한된 수의 의견기사만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과 <표 4> 참조).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국내 6대 일간지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슈 관련 전체 기사의 약 70%정도를 ‘중부세 개편안 발표 연기’ ‘중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9억’ 등과 같은 ‘단순 정보 전달’ 기사로 다루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이슈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제목기준, 각각 83.7%, 83.3%)을 차지하였으며,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때에는 '지지' 입장(제목기준, 각각 14.3%, 14.6%)을 보였다. 반면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단순 정보 전달'이 조선, 중앙일보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 입장(제목기준, 31.8%)을 드러내었고, 한국일보는 지지(14.1%)와 반대(21.9%)의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이슈에 대한 반대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단순 정보전달'보다는 '이슈에 대한 반대' 입장(제목기준, 각각 45.8%, 40.0%)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중앙일보의 경우 종부세의 변화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을 소개하거나, 종부세의 부당성을 보도하는데 치중하였다. '나성린 "종부세는 징벌적 조세"'(중앙일보 2008.9.25), "'전(前)정권이 강남 왕따시키려 만든 법 손 봐야'(조선일보, 2008.11.20), 종부세 대폭 완화 "징벌세제 바로잡자"...'세금폭탄'뇌관 제거'(동아일보, 2008.9.23) 등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징벌적 조세' '강남 왕따시키려 만든 법' '세금폭탄'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드러내었다.

반면에 한겨레·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종부세의 변화내용이나 종부세 논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종부세 대상자의 특성이나 종부세 무력화, 계층갈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다루었다. 즉,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재판관 8명 종부세 대상/이해당사자가 판단한 셈'(한겨레신문, 2008.11.14), '종부세 개정안 발표/집부자 종부세는 깎고...서민, 중산층 재산세는 올려'(한겨레신문, 2008.9.24), '소득격차 사상최대 '원인' 따져보니/저소득층-근로소득 깎여 '한숨'/고소득층-종부세 되받아 '날개''(한겨레신문, 2009.6.1.), '종부세 사실상 무력화/시민, 사회단체 "1% 부자들을 위한 결정"실망'(경향신문, 2008.11.14) "28만 '강부자'위한 종부세 인하"논란(경향신문, 2008.9.22)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일보의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부자 세금깎고 공공료 올리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 퍼부어"(한국일보, 2008.7.25). 하지만 이처럼 계층 간의 갈등으로 프레임하는 기사는 조선·중앙·동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종부세 폐지로 혜택을 보게 되는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화로 이 이슈가 계층 갈등적인 이슈임을 부각시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조선·중앙·동아와 한겨레·경향의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가장 찬성하는 신문에서 가장 반대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동아 - 중앙 - 조선 - 한국 - 경향 - 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 신문별 '종합부동산세 폐지'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 제목 및 본문 입장

신문/제목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단순정보전달		이슈 지지		이슈 반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41	36	7	10	1	3	49
	83.7%	73.5%	14.3%	20.4%	2.0%	6.1%	100.0%
중앙	40	34	7	12	1	2	48
	83.3%	70.8%	14.6%	25.0%	2.1%	4.2%	100.0%
동아	42	49	21	17	3	2	66
	63.6%	72.1%	31.8%	25.0%	4.5%	2.9%	100.0%
한겨레	36	51	9	5	38	27	83
	43.4%	61.4%	10.8%	6.0%	45.8%	32.5%	100.0%
경향	62	76	7	9	46	31	115
	53.9%	65.5%	6.1%	7.8%	40.0%	26.7%	100.0%
한국	41	48	9	7	14	9	64
	64.1%	75.0%	14.1%	10.9%	21.9%	14.1%	100.0%

\* 제목 카이스퀘어 검증:  $\chi^2=91.850$ ,  $df=10$ ,  $p<.001$

\*\* 본문 카이스퀘어 검증:  $\chi^2=54.268$ ,  $df=10$ ,  $p<.001$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의견기사의 경우에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지지 입장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반대 입장으로 명확하게 나눠짐을 아래의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경우, 의견기사에서 종부세의 부당함을 강변하기도 하고, 종부세 개편을 서두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달랑 집 한 채도 '세금 폭탄' 집값 잡겠다더니 집주인 잡았다'(중앙일보, 2008.7.26), 종부세, 너무 가혹하다(동아일보, 2008.8.6), 위헌 법률 방치하는 국회는 직무유기(중앙일보, 2008.11.18), 현재 결정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중앙일보, 2008.11.15),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시켜야'(조선일보, 2008.9.24) 등이 그 예이다. 반면에 한겨레, 경향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층 불화에 대한 의견기사를 주로 게재하였다. '서민 제쳐놓고 집부자부터 챙기나'(한겨레신문, 2009.12.17), '부자 감세'관철한 여당, 막는 척 시늉만 낸 야당(경향신문, 2008.12.8)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일보 또한 종부세의 계층불화를 주로 다루기도 하였으나, 이와 함께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정비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한국일보, 2008.11.14), 여야는 종부세 보완, 개편 서둘러야(한국일보, 2008.11.1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견 기사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가장 찬성하는 신문에서 가장 반대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중앙 - 동아 - 조선 - 한국 - 경향 - 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 신문별 '종합부동산세 폐지' 관련 의견 기사 제목 및 본문 입장



신문/제목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중립		이슈 지지		이슈 반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2	1	4	5			6
	33.3%	66.7%	50.0%	83.3%			100.0%
중앙	1		2	3			3
	33.3%		66.7%	100.0%			100.0%
동아	4	2	10	12			14
	28.6%	14.3%	71.4%	85.7%			100.0%
한겨레	7	1			13	19	20
	35.0%	5.0%			65.0%	95.0%	100.0%
경향	3	1			14	16	17
	17.6%	5.9%			82.4%	94.1%	100.0%
한국	5	3			7	9	12
	41.7%	25.0%			58.3%	75.0%	100.0%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기사 모두에서 조선.중앙.동아와 한겨레.경향의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분석 기간 동안 이슈에 대해 가장 많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가장 많은 의견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중요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려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3)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내 6대 일간지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는 조선 37건, 중앙 50건, 동아 35건, 한겨레 43건, 경향 40건, 한국일보 33건으로 중앙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 많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실 및 칼럼과 같은 의견기사의 수는 조선 8건, 중앙 9건, 동아 11건, 한겨레 13건, 경향 12건, 한국일보 9건으로 신문사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5>과 <표 6> 참조).

‘호주제 폐지’에 대한 신문들의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 성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단순 정보 전달’ 기사보다도 ‘지지’ 입장의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신문들의 ‘지지’ 입장 표명이 20~30% 정도인데 반해 한겨레신문의 경우 약 50%가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겨레신문만큼은 아니지만,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경우, ‘지지’ 입장의 기사가 ‘반대’ 기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호주제 폐지’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지’ 입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호주제 폐지' 스트레이트 기사 제목의 입장

신문/입장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단순정보전달		지지		반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25	23	7	8	5	6	37
	67.6%	62.2%	18.9%	21.6%	13.5%	16.2%	100.0%
중앙	31	31	15	15	4	4	50
	62.0%	62.0%	30.0%	30.0%	8.0%	8.0%	100.0%
동아	28	27	6	7	1	1	35
	80.0%	77.1%	17.1%	20.0%	2.9%	2.9%	100.0%
한겨레	18	19	23	22	2	2	43
	41.9%	44.2%	53.5%	51.2%	4.7%	4.7%	100.0%
경향	29	27	10	12	1	1	40
	72.5%	67.5%	25.0%	30.0%	2.5%	2.5%	100.0%
한국	25	21	7	10	1	2	33
	75.8%	63.6%	21.2%	30.3%	3.0%	6.1%	100.0%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제목기준, 13.5%)도 상당히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JP "호주제폐지는 무책임 발상...결단코 반대"(조선일보, 2003.11.13), "일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하는 것은 황당한 발상"(조선일보, 2003.5.7) 등의 기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성균관 유림의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함으로써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었다. 즉, ‘지지’ 입장의 기사와 함께 ‘반대’ 입장의 기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게재하여 여타 신문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2003년 대통령 인수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후 호주제 위헌 심판에 대한 5차례의 공개변론이 계속되는 기간에 ‘지지’ 일변도의 기사가 가득한 보도 속에서 ‘반대’ 입장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반대 입장의 기사를 사회적 합의가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의 제시라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나서도 계속 반대 입장의 기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제 폐지 법안(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면 호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5년 3월 3일자 기사에서 "男의원들 부끄럽다 차라리 떼고 다녀라" 김용갑, 호주제폐지 반발(조선일보), 김용갑 “불편한 것 달지 말고 떼 버리세요”..호주제 폐지 반대토론 나서(동아일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하루 전인 3월 2일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자로 나와 “이 자리에 있는 남자 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이러려면 불편한 것 달고 다니지 말

고 때버리라...일부 여성들이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성 인권을 높이는 것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있다”며 말한 것을 보도하며 매우 원색적인 말을 제목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05년 3월 11/12일자 기사에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개정된 지 이틀만에 한 시민이 위헌 헌법소원한 것을 보도하였다. "남편들 TV도 제대로 못보는데 호주제 폐지?" 法개정 이틀만에 한 시민이 '위헌'헌법소원(조선일보, 2005.3.12), 호주제폐지법안 이틀만에 헌법소원(중앙일보, 2005.3.11)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처럼 이슈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가장 반대하는 신문에서 가장 찬성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조선 - 동아 - 중앙 - 한국 - 경향 - 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의견기사의 경우, 제목에서 특정한 입장 표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소수 있었을 뿐, 대부분의 기사는 지지나 반대와 같은 입장 표명을 제목과 본문에서 분명히 하였다. 분석 대상의 모든 신문들이 제목 보다는 본문 내용에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였는데, ‘호주제 폐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으로 2003년 대통령 인수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후 호주제 위헌 심판에 대한 5차례의 공개변론이 계속되는 기간을 선정하였지만, 이미 호주제 폐지를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기사를 각각 3건과 2건 보도하였다.

<표 6> ‘호주제 폐지’ 의견 기사 제목 및 본문의 입장

신문/입장	무입장		입장 표명				전체
	단순정보전달		지지		반대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조선	3	2	3	3	2	3	8
	37.5%	25.0%	37.5%	37.5%	25.0%	37.5%	100.0%
중앙	3	2	4	5	2	2	9
	33.3%	22.2%	44.4%	55.6%	22.2%	22.2%	100.0%
동아	4	3	7	8	0	0	11
	36.4%	27.3%	63.6%	72.7%	.0%	.0%	100.0%
한겨레	4	0	9	13	0	0	13
	30.8%	.0%	69.2%	100.0%	.0%	.0%	100.0%
경향	4	1	8	10	0	1	12
	33.3%	8.3%	66.7%	83.3%	.0%	8.3%	100.0%
한국	4	0	5	8	0	1	9
	44.4%	.0%	55.6%	88.9%	.0%	11.1%	100.0%

\* 제목 카이스퀘어 검증:  $\chi^2=19.233$ ,  $df=15$ ,  $p=203$

\*\* 본문 카이스퀘어 검증:  $\chi^2=28.466$ ,  $df=15$ ,  $p<.05$

조선일보의 경우, 한 달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의 외부칼럼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의 시론 ‘이번엔 호주제 꼭 고쳐야’(2003.5.16)에서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염려를 표하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우매함으로 호주제 개정이 안될까를 염려하였다. 반면에 한 달 뒤인 6월 20일자에서는 호주제폐지반대 전국여성본부 본부장의 시론 ‘호주제 폐지 안된다’(2003.6.20)에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호주제는 사라져도 가족가치는 지켜져야”(2005.3.3)라는 칼럼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가족의 유대 및 전통 가족양식의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앙일보의 경우, 호주제 폐지를 사회변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실 “호주제, 불평등 없도록 개정돼야”(2003.5.6.)에서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의 가족문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녀차별적 법조항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호주제 폐지를 적극 지지함을 천명하였다. 또 다른 사실 “호주제 폐지 혼란없게 철저한 준비를(2005.1.13.)에서도 “우리는 이미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호주제 폐지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고 쓰여져 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도 모두 호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의 칼럼들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신문들이 지지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1999년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3년여간 간간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의 신문들이 이미 '호주제 폐지'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보낸 반면, 중앙일보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견 기사에서 호주제 폐지에 가장 반대하는 신문에서 가장 찬성하는 신문의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그리면, 조선 - 중앙 - 동아 - 경향 - 한국 - 한겨레신문의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 (4)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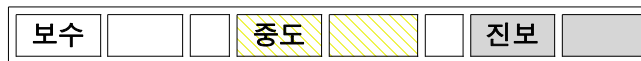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슈에 따라 즉, 이념성 차원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변동이 발견되었으며, 보수와 진보의 각 영역 내에서도 미세한 변동이 발견되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보수 진영에, 한겨레신문이 진보 진영에,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중도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세 폐지’에 있어서는 동아, 중앙, 조선이 보수 진영에, 한겨레, 경향신문이 진보 진영에, 그리고 한국일보가 중도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제 폐지’에 있어서는 조선일보만이 보수 진영에, 나머지 중앙, 동아, 한국, 경향, 한겨레가 진보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보수로 알려진 동아, 중앙일보가 진보일 때도 있고, 경향이 진보가 아닌 중도일 때도 있으며, 중도적인 신문으로 알려진 한국일보가 진보일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슈에 따라 또는 이념성 차원에 따라 신문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성 지형에 미세한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맨 끝에는 동아일보가, 그 반대편 끝에는 ‘한겨레신문’이 자리잡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반대하는 측의 맨 끝은 중앙일보가, 그리고 또 다른 반대측의 맨 끝은 ‘한겨레신문’이 차지한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의 경우, 반대하는 측의 맨 끝은 조선일보가, 또 다른 측은 한겨레신문이 차지하고 있다. 즉, 정치이념적 차원에서는 동아일보가, 경제적 가치 차원에서는 중앙일보가, 전통문화적 차원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보수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 영역에서는 이념성 차원에 상관없이 한겨레신문이 모두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슈별 신문들의 보수-진보 스펙트럼**

대북지원 (스트레이트)	동아	조선	중앙	경향	한국	한겨레
(의견기사)	동아	조선	중앙	경향	한국	한겨레
중부세폐지(스트레이트)	동아	중앙	조선	한국	경향	한겨레
(의견기사)	중앙	동아	조선	한국	경향	한겨레
호주제 (스트레이트)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	한겨레
(의견기사)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국	한겨레



## 2) 내적 다양성

앞선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뉜 신문들이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서로 다른 입장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조차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 종합일간지인 6개 신문사가 의견기사가 아닌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각 신문들이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내적 다양성은 제목과 본문에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반된 입장의 취재원을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상반된 입장의 제시

의견 기사에서는 일관성 있는 이념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를 제시해 주어야 내적 다양성이 있다고 하겠다. 스트레이트 뉴스의 방향성은 신문사들이 첨예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이슈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을 제외하고 입장이 드러난 스트레이트 기사만을 대상으로 각 이슈별로 신문들이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사 제목에 나타난 입장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북 지원 북한 핵’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이 ‘핵 포기하면 대북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다수 드러내면서도 ‘핵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을 하자던가, ‘대북지원 중단/불가’에 대한 기사도 비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제시해 주고 있었다. 다만, 한겨레신문의 경우 ‘핵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지’ 입장(87.5%)의 기사가 ‘반대’ 입장(12.5%)의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한겨레, 경향신문의 경우 ‘반대’ 입장(각각 80.9%, 86.8%)의 기사가 ‘지지’ 입장(각각 19.1%, 13.2%)의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즉, 양측 모두 상반된 입장의 기사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반대’ (60.9%)가 ‘지지’(39.1%)보다 다소 높았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지지’ 입장 (89~90%정도)의 기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한 반면, ‘반대’ 입장의 기사는 거의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선일보만이 ‘지지’ 입장(58.3%)과 ‘반대’ 입장(41.7%)의 기사를 비슷한 비율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의 이러한 관점의 불균형은 의견기사에서 드러난 성향의 차이와 일치함으로써 신문들의 이슈에 대한 편향적인 성향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다

양한 관점의 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 기사 제목에 나타난 입장의 분포

신문/ 입장	대북지원				종합부동산세 폐지			호주제 폐지		
	해포기 별개로 대북지 원	해포기 하면 대북지 원	대북지 원 중단	전체	지지	반대	전체	지지	반대	전체
조선	3	8	3	14	7	1	8	7	5	12
	21.4%	57.2%	21.4%	100.0%	<b>87.5%</b>	12.5%	100.0%	<b>58.3%</b>	<b>41.7%</b>	100.0%
중앙	2	6	6	14	7	1	8	15	4	19
	14.2%	42.9%	<b>42.9%</b>	100.0%	<b>87.5%</b>	12.5%	100.0%	<b>78.9%</b>	21.1%	100.0%
동아	3	4	6	13	21	3	24	6	1	7
	23.1%	30.8%	<b>46.1%</b>	100.0%	<b>87.5%</b>	12.5%	100.0%	<b>85.7%</b>	14.3%	100.0%
한겨레	9	4	3	16	9	38	47	23	2	25
	<b>56.3%</b>	25.0%	18.7%	100.0%	19.1%	<b>80.9%</b>	100.0%	<b>92.0%</b>	8.0%	100.0%
경향	4	3	2	9	7	46	53	10	1	11
	<b>44.5%</b>	33.3%	22.2%	100.0%	13.2%	<b>86.8%</b>	100.0%	<b>90.9%</b>	9.1%	100.0%
한국	5	7	8	13	9	14	23	7	1	8
	18.5%	25.9%	29.6%	100.0%	39.1%	<b>60.9%</b>	100.0%	<b>87.5%</b>	12.5%	100.0%

## (2) 취재원 균형지수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뉴스가 될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특정 사건이나 의제를 해석하는 시각이나 맥락까지 영향을 받는다(Shoemaker & Reese, 1996)고 한다. 따라서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취재원이 누구냐에 따라 보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인지, 이들의 이념적인 성향은 어떠한지, 얼마나 다양한 취재원들이 어느 정도의 지면을 차지하며 등장하는지는 언론 보도가 누구의 시각에서 현실을 재 해석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취재원의 다양성이 내용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취재원이 등장하더라도 한 가지 목소리만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취재원 한 명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재원의 다양성 분석만으로는 언론 보도가 특정 사안을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보여주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이진영, 2008). 이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취재원의 다양성은 취재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입장을 ‘지지’와 ‘반대’로 나누어 코딩한 다음, 반대 입장의 취재원 수에서 지지 입장의 취재원 수를 빼어 이를 전체 취재원 수로 나눈 값을 취재원 균형지수로 삼았다. 따라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지지와 반대 입장의 취재원을 균형 있게 사용한 것이고, 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취재원의 불균형은 심각해지는 것이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재원 균형지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취재원 균형지수에 따라 신문들의 순서를 배열해 보면 한겨레(.0752) - 경향(-.0603) - 중앙(-.1631) - 한국(-.2467) - 조선(-.3521) - 동아(-.3536)의 순서이다. 즉,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취재원 균형지수가 가장 높으며(물론 한겨레는 반대 입장의 취재원을, 경향은 지지 입장의 취재원을 다소 더 많이 사용했지만), 그 다음이 중앙, 한국, 조선, 동아일보의 순이었고 이들은 모두 지지 입장의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중앙- 동아 - 조선 - 한국 - 경향 - 한겨레)와 비교해 보면, 취재원 균형지수가 이슈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조선일보의 취재원 균형지수가 가장 높으며(-.26), 그 다음이 동아일보(-.29), 한겨레(-.37), 중앙(-.43), 경향(-.46), 한국(-.55) 순이었다. 이는 모든 신문이 지지 입장의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가장 균형적으로 취재원을 사용한 신문이 조선일보라는 것이다.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해 사회적으로 좀 더 우세한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의 신문사들이 반대 입장의 취재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취재원 균형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조선, 동아일보는 성균관 유림 등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도함으로써 균형지수가 높아진 것이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폐지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한겨레, 경향이 종부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야당 정치인을 취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취재원 균형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내의 지배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의 신문이 반대 의견을 펼치기 위해 입장이 다른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취재원 균형지수가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북지원 북한 핵의 경우, 신문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북지원의 경우 북한 관련 기사는 대부분 국가안보나 외교에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원이 정부·여당 및 미국 등에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신문간에 취재원에 따른 차이나, 취재원 균형지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취재원 균형지수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신문들의 취재원 균형지수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취재원 균형지수 값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인가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취재원 균형지수 값이 한 쪽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일간지들의 내적 다양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취재원 균형지수

신문	대북지원 북한 핵*			종합부동산세 폐지**			호주제 폐지***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조선	23	-.1304	.64345	24	-0.3521	0.6066	33	-0.2686	0.7958
중앙	23	-.1232	.67461	24	-0.1631	0.5581	38	-0.4390	0.6439
동아	31	-.2043	.61420	41	-0.3536	0.5264	26	-0.2921	0.6573
한겨레	32	-.0781	.66665	58	0.0752	0.7171	35	-0.3737	0.6835
경향	23	-.0435	.67694	79	-0.0603	0.6332	32	-0.4657	0.6091
한국	25	-.0147	.57559	48	-0.2467	0.5640	31	-0.5591	0.6169
합계	157	-.1021	.63493	274	-0.1427	0.6317	195	-0.4023	0.6701

\*  $F=.311$ ,  $df=5$ ,  $p=.91$

\*\*  $F=3.51$ ,  $df=5$ ,  $p<.005$

\*\*\*  $F=.83$ ,  $df=5$ ,  $p=.528$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신문들의 이념성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회적 통념과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 6대 일간지들의 이념성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성이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문들의 이념성에 대한 연구는 단일 이슈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들의 이념성을 정치이념적 차원(대북지원 북한 핵), 경제적 가치의 배분 차원(종합부동산세 폐지), 사회·문화적 차원(호주제 폐지)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신문들의 보수-진보 이념성 스펙트럼은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수로 알려진 동아, 중앙일보가 ‘호주제 폐지’ 이슈에서는 진보로 나타났고, 경향신문이 ‘대북지원’ 이슈에서는 진보가 아닌 중도로 나타났으며, 중도적인 신문으로 알려진 한국일보가 ‘호주제 폐지’ 이슈에서 진보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슈에 따라 또는 이념성 차원에 따라 신문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성 지형에 미세한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세 가지 차원의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보수와 진보의 각 진영 내에서도 미세한 변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이슈에 따라 보수 신문들의 극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정치이념적 차원의 ‘대북지원 북한 핵’의 이슈에서는 동아일보가, 경제적 가치의 배분 차원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에서는 중앙일보가, 사회문화적 차원의 ‘호주제 폐지’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극단적인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보수 신문들의 지형도는 이념성 차원에 따라 보수 영역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

고, 진보 신문들의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이 가장 극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중도와 진보 영역에서 이슈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이념성 차원에 따른 차이인지, 아니면 이슈에 따른 차이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념성의 각 차원에 따라 하나의 이슈만을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차이가 각 차원의 여러 이슈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차이인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일간지들의 내적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나타난 관점의 균형성과 취재원 균형지수로 살펴보았다. 의견 기사에서는 일관성 있는 이념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를 제시해 주어야 내적 다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 정보 전달을 제외하고 입장이 드러난 스트레이트 기사만을 대상으로 각 이슈별로 신문들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는가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만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한국일보의 보도만이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의견기사에서 드러난 성향과 스트레이트 기사에서의 관점의 불균형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해볼 때, 신문들의 이슈에 대한 편향적인 성향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다양한 관점의 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취재원 균형지수에 있어서, 국내 신문들의 취재원 균형지수 값이 한쪽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일간지들의 내적 다양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신문들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취재원을 공평하게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내적 다양성을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 측면 모두 내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이 모두 충족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관점의 신문들이 존재해야 사회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의 외적 다양성만큼이나 내적 다양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진영(2008)이 지적한 것처럼, 보도 성향이 서로 다른 복수의 신문을 병독하는 독자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자기와 다른 의견에 노출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적 다양성이 높더라도 개별 신문의 내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문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보도영역에 따라 그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강형철(1999)에 의하면 신문의 보도영역은 기사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보도영역과 비객관적인 보도영역으로 나뉜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객관성의 영역으로서,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이루어진다.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기사의 경우 비객관의 영역으로서 주관적인 선택상황에서 드러내 놓고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문의 의견기사 영역에서는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을 분명히 하더라도, 스트레이트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성과 불편부당성, 즉, 관점의 균형적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이슈만을 가지고 신문들의 이념성향을 구분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신문의 보수-진보 이념성향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 따른 구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로 여러 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여야 그것이 이슈에 따른 차이인지, 이념성 차원에 따른 차이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로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들 간에 이념성 차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통권 7호), 193-217.
- 강정인 (1997). 보수와 진보 - 그 의미에 관한 분석적 고찰. R. 니스벳, C.B. 맥퍼슨, 강정인·김상우 (역),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 지성사.
- 강형철 (1999).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제26호, 113-146.
- 김성태 (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2호, 39-67.
- 김원식(2002). 한국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 진보-보수 논쟁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제언, <사회와 철학>, 제4호, 51-78.
- 김정아·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1호, 232-267.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재단, 147-220.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80-104.
- 안병영 (2003). 사회개혁의 성숙한 길 - 보수와 진보의 바른 만남, <철학과 현실>, 통권 제57호, 29-36.
- 원만해·채백 (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이건호·고홍석 (2009). 취재원 활용을 통해 살펴본 한국 신문의 보도시각 고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에 나타난 취재원 신뢰도와 유인가(Valence)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347-369.
- 이민규·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

- 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권, 132-162.
- 이준웅.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이진영 (2008). 시장 구조의 변화와 보도의 다양성: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신문의 전략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호순 (2001).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 분석.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9-193.
- 정재철(2002). 한국언론과 이념 담론. <한국언론학보>, 제 46-4호, 314-348.
- 정영태 (2002). 진보는 대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보 대 보수' 구도가 되기 위한 조건들, <월간 말> 2002년 11월, 54-59.
- 정일권.조운경.정희영 (2007). 사회적 통합 요구에 따른 신문보도 다양성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타 국가와의 갈등 보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199-225.
- 정재철 (2001).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7권, 112-144.
- 정재철 (2004).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권 135-162.
-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4집, 겨울호, 83-102.
- 홍윤기 (2002).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진보-보수-관계'의 wkred과 그 한국적 상황 - '진보-보수-담론'의 성립조건에서 본 한국 정치문화의 부실성. <사회와 철학>, 제4호, 15-50.
- 황치성 (2008). 갈등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서울: 한국언론재단.
- McQuail, D. & van Cuilenburg, J.J. (1983). Diversity as a media policy goal. *Gazette*, 31(3), 145-162.
- Seymour-Ure, C. (1991). *The British press and broadcasting since 1945*. Oxford: Blackwell.